

박진경이라는 기호와 논쟁화되는 사실들 -제주 4.3의 제도화 이후 담론 변화를 중심으로

김동현(제주대)

1. '추도'와 '진실'의 격차

제주시 아라동 열안지 오름 인근에는 박진경 추도비가 세워져있다. 1952년 11월 '제주도민 및 군경원호회원 일동' 명의로 세워졌던 원래의 추도비의 비문이 마모되어 1985년 6월 다시 세워진 것이다. 이 비석에는 "제주도 공비 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불행하게도 장렬하게 산화하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박진경은 제주 4.3 초기 진압 과정에서 강경진압 작전의 직접적인 수행자이자, 학살의 장본인이었다. 제주 4.3 학살의 주범이었던 박진경 추도비는 그동안 제주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2022년에는 제주민예총을 비롯한 제주 4.3 관련 단체들이 박진경을 역사의 감옥에 가둬야 한다며 추도비에 쇠창살로 된 역사의 감옥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박진경을 "미군정 지시로 제주 4.3학살을 집행했던 자"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고 조형물 설립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¹⁾ 제주 4.3 학살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아온 박진경의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이들의 요구는 2025년 12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 등에 의해 진실 안내판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급기야 '진실 안내판'이 세워지던 당일에는 일부 극우 단체들과 극우 유튜브들이 행사장을 찾아 제주도의 조치를 좌파적 행위이자, 박진경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고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제주도민 30만을 싹 쓸어버려도 좋다"고 했던 당시의 증언은 부정되었고, 선무공작과 양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의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제주 4.3 당시 박진경에 행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방부의 전신이었던 통위부의 담화발표와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 그리고 미군정 보고서에는 박진경 부임 이후 1주일만에 3천여명을 검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경 연대장 부임 당시 소속 부대원이었던 11연대 양성팔 하사도 박진경의 강경진압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²⁾ 박진경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통위부 전투정보과장 김점곤의 증언(『제주 4.3사건 증언자료집』6) 등도 추가로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의 증언과 다른 것은 11연대 소위였던 채명신(중장 예편)의 증언이 있을 뿐이다.³⁾ 이러한 사실 관계에도 불구하고 박진경은 또 다시 노골화된 혐오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2025년 세워진 진실 안내판은 역설적으로 박진경이 제주 4.3의 성격 규정을 두고 거대한 반동적 흐름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추도'와 '진실'의 격차 사이에서 박진경은 제주 4.3의 둘러싼 대결적 국면의 기호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보고서

1) '제주 4.3학살 박진경, 70여년만에 역사의 감옥 가됐다.', 제주외소리, 2022. 3.11

2) 확실히 박진경 연대장은 김익렬 연대장 시절과는 달라 강경진압작전으로 치고 나갔다. 전도에 걸쳐 토벌작전이 전개됐다. 현지에서 잡아들인 혐의자를 호송하지 않고 즉결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에 대감을 꽂아 찌르도록 하기도 했다. 『4.3은 말한다』3, 146쪽.

3) "박진경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한한 주민들의 하산에 작전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민간인 보호작전은 인도적이면서 전략적 차원의 행동이었다."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220쪽. 하지만 채명신의 증언은 당시 현지 상황과 견주어 보면 매우 이질적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명신의 증언을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에 의해 밝혀진 사실을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제주4.3의 성격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극우의 의도라면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의도는 그야말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박진경인가. 그리고 왜 박진경을 문제삼아야 하는가. 이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2. 외면된 책임과 재서사화되는 가해자

제주 4.3진상규명 운동과정은 그 자체로 한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제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이어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까지, 제주 4.3의 제도화 이후 벌어진 진상규명의 과정의 성과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국가'라는 추상의 언어 뒤에 숨겨져 있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역시 이러한 추상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다. 강경토벌의 직접적 당사자였던 가해자의 책임을 '외면' 혹은 '연기' 되는 동안 강경 토벌의 지침을 '충실히' 수행한 지휘관은 오히려 추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속되어온 '기억투쟁'의 양상을 전도시키며 재서사화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영화 <건국전쟁 2>이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공투쟁의 대결 과정으로 수렴하면서 이른바 좌파적 역사관의 교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영화의 인트로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자막은 우파적 시각의 새로운 역사 서사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해방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제주 4.3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진경에 대한 재서사화이다. 제주 4.3을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제주도를 접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폭동이자 반란"이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시각은 박진경은 학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의 승고한 희생자로 재서사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제주도민 30만을 싹 쓸어버려도 좋다"는 발언은 단순한 군인의 호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주도민을 반공-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제주도민을 도려내야할 신체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생물학적 잉여로 규정하는 주권자의 선언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천지에 실린 조덕송의 기사인데, 여기에는 "공산주의 독균에 감염"된 표현이 등장한다. 송요찬의 포고령은 제주의 증산간을 인간이 거주하는 마을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거대한 감염자들의 땅으로, '폭도'와 '빨갱이'라는 호명은 학살의 윤리적 부채감을 지워버리는 알리바이로 작동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그들의 토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비인간을 제거하는 성공적 사냥이 되어 버린다. 박진경이 주도한 무차별 검거와 강경진압은 이러한 비윤리의 적극적 실천이었다.

박진경 추도비 옆에 진실의 안내판을 세우는 현장에 극우 단체들이 모여서 "제주 4.3은 폭동"이라고 외치는 행위에는 결국 비인간에 대한 죽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권력을 현재적 대립으로 만들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최근의 <건국전쟁> 류의 영화와 극우 유튜브들의 담론은 이를 21세기의 스크린 위로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들의 서사 속에서 박진경은 혼돈에 빠진 제주를 구하러 온 '빛의 사도'이자 '문명의 수호자'다. 반면, 4.3 당시 생존을 위해 산으로 올랐던 도민들과 그들의 유족은 문명을 위협하는 '반동'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이분법은 역사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소거한다. 학살의 원인이 된 미군정의 실정과 단선 강행이라는 구조적 모순은 사라지고, 오로지 '악(폭도)을 물리치다 순국한 영웅(박진경)'의

신화만이 남는다. 이것은 기억의 왜곡을 넘어선, 기억의 '식민화'다. 그들은 박진경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희생자들의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폭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두어버린다. 파농이 경고했듯, "식민주의는 원주민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지금 박진경을 띄우는 저들의 시선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4.3의 희생자는 애도해야 할 인간이 아니라, 토벌되어 마땅했던 '비(非)국민'일 뿐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왜 이토록 노골적으로 야만이 귀환하고 있는가. 박진경이라는 기호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하고 싶어 하는, 우리 안의 파시즘이 투영된 거울이다.